


(참고자료-참조71)

용인시 사례: 공공시설 정치적 사용 불가

"공공시설 정치적 이용?"...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조례 개정 논란

일제 2022-12-02 09:00:00

이상일 시장 "유감 표명 재의 요구하겠다"



용인특례시의회 공공시설 개방-사용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 공공시설을 정치적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 됐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22일 열린 제269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이 안건은 지난 20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됐지만, 본회의에 다시 상정돼 찬성 17, 반대 15표로 최종 가결됐다. 민주당 시의원 한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더불어민주당 장현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정치·종교 등의 목적으로 공공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기존 조례에서 공직 선거법 등 법령에서 허용되지 않는 정치적 행위나 선거운동,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입석 홍보, 당원 모집 등의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사실상 사용 제한 기준을 완화하면서 공공시설을 정치적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 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치적 목적으로는 공공시설 사용이 원천적으로 금지돼 있었지만 일부의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의 경우 사용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란 이유에서다.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조례 재의 요구..."정치 선전장 우려"

용인시, '국회의원의정보고회문호' 공공시설 개방조례개정안재의요구방침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정치활동을 시 공공시설에서 할 수 있게 한 조례개정안 반대"

사회회 민주당, 비상식적인 안건을 상식화해 통과... 이 시장 강하게 비판 이 시장, 조만간 '재의' 요구할 것..."조례개정안...휴지조각 될 가능성 커"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가 28일 공약을 해질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지난 22일 의결된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재의를 시의회에 요청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불관여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진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료화면 1